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2. 3. 28

No. 2012-06

2012년 러시아 대선 평가 및 국내외 정책 전망

교수 고재남

1. 문제의 제기

- 금년 들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대선 또는 최고 지도자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3월 4일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예상대로 푸틴 총리가 승리해 오는 5월 7일 제3기 푸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 대통령 재임 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재부상시킨 푸틴(Vladimir Putin)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는 지난 4년 내내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으며,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함.
 -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핵무기 강대국인 러시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리아 사태’가 증명해 주듯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 육지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는 16개국과 접경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중동 포함)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국내적 차원에서, 사실상 지난 12년간 지속된 ‘푸틴주의(Putinism)’¹⁾가 짧게는 6년(2018년까지), 길게는 12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및 평가
3. 제3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실제로 푸틴은
국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된
'7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정책 방향은
향후 글로벌 정세,
지역 정세,
양자 관계 및
러시아 국내
정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4년까지) 더 지속되면서 러시아 국내 정세의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임.

- 실제로 푸틴은 대선 기간 중 국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된 '7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정책 방향은 향후 글로벌 정세, 지역 정세, 그리고 양자관계 및 러시아 국내 정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푸틴은 과거와 유사하게 국익 보호와 대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개혁을 통한 내정안정,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경제 현대화, 군사력 강화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국익 및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국력에 기반하여 러시아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또한 푸틴은 대선 기간 중 반 미국, 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공세를 이어가면서 독립 국가연합(CIS: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의 통합 강화, EU, 중국, 인도, 남·북한 등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천명하였음.
 - 특히, 푸틴은 한편으로는 북핵 불용과 김정은 정권의 안착 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현대화의 요건인 높은 교육 수준과 산업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의 사례로 한국을 두 번 거명하였음.
- 따라서 국내외적 관심은 첫째, 푸틴 정부가 국가두마 선거와 대선을 계기로 분출된 중산층 및 시민단체들의 민주화, 부패척결 등 정치 개혁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둘째, 과도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군사력 강화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 및

1) '푸틴주의'는 서방 언론 및 러시아 분석가들이 푸틴 정부의 이데올로기, 정책 우선성, 정책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임. '푸틴주의'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 국가 자본주의, 집권세력(Siloviki)의 극심한 정경유착과 부패, 정당경쟁 체제 미비, 불공정 선거제도, 언론통제, 취약한 인권보호제도, 대 CIS 통합주의, 공세적·독자적 외교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지, 셋째, 푸틴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이 국내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넷째, 국가두마 선거 후 표출된 미·러 간 상호 비방전(예: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 장관 대 푸틴 총리) 및 미국의 유럽 내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 추진이 향후 미·러 관계는 물론 국제현안(예: 시리아 사태, 이란 핵개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섯째, 푸틴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제3기 푸틴 정부의 출범을 가져온 대선 결과를 평가한 후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서 향후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2.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및 평가

가. 대선 개요 및 결과

- 지난 3월 4일 실시된 대선은 러시아가 1991년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서(물론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1996년 6~7월 첫 실시됨), 대선에는 <표 1>과 같이 통합러시아당의 후보 지명을 받은 푸틴, 러시아 공산당의 후보지명을 받은 쥬가노프(Gennady Zyuganov), 자유민주당의 후보지명을 받은 지리노프스키(Vladimir Zhirinovsky), 공정한 러시아당의 후보지명을 받은 미로노프(Sergey Mironov), 그리고 무소속 후보인 프로호로프(Mikhail Prokhorov) 등 5명이 출마하였음.
 - 이로써 지금까지 실시된 6번의 대선 중 미로노프는 두 번, 푸틴은 세 번, 쥬가노프는 네 번, 지리노프스키는 다섯 번 출마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야블로코당의 야블린스키(Grigory Yavlinsky)와 10명의 무소속 후보들의 대선 후보등록을 유효한 후보 추천 서명자 수의 부족 또는 결함, 제출서류 부족, 국내 거주기간(10년 이상)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국내외적 관심은 푸틴 정부의 정치 개혁 요구 수용 정도, 군사력 강화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 추진 여부,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영향, 향후 미·러 관계, 아태지역 중시정책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에 대한 영향이며...

개표 결과,
 예상대로 푸틴이
 총 유효투표의
 63.60%를 획득하여
 차점자인 쥬가노프를
 46.42% 차로 따돌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오는 5월 7일
 6년 임기의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며...

- 대통령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두마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 지도자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후보는 유권자 20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서명 검사에서 5%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면 대선 후보등록이 거부됨. 야블린스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검증에서 25.7%의 결함이 발견됨.
- 대선 투표는 극동 캄차카 지방으로부터 극서 칼리닌그라드 주까지 총 10시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약 9만 5,000개의 투표소에서 총 유권자 약 1억 960만 명 중 약 7천 150만 명, 즉 65.35%가 현지 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실시되었음.
- 과거 대선 투표율의 경우, 1991년에는 76.66%, 1996년 1차 투표(6월 16일)에서는 69.8%, 2차 투표(7월 3일)에서는 68.8%, 2000년에는 68.64%, 2004년에는 64.38%, 2008년에는 69.7%를 각각 기록하였음.
-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시비 차단을 통한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해 700여 명에 달하는 국제 선거감시인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사상 처음으로 각 투표소에 웹캠, 즉 인터넷용 감시 카메라를 2개씩 설치하였음.

〈표 1〉 2012년 3월 대선 결과

후 보	후보지명 정당	득 표	비율(%)
푸틴	통합러시아당	45,602,075	63.60
쥬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12,318,353	17.18
프로호로프	무소속	5,722,508	7.98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4,458,103	6.22
미로노프	공정한 러시아	2,763,935	3.85
유효 투표		70,864,974	98.84
무효 투표		836,691	1.16
총 투표		71,601,665	100.00
총 유권자/투표율		109,860,331	65.17

* 출처: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
 (검색일: 2012년 3월 11일)

- 개표 결과, 예상대로 푸틴이 총 유효투표의 63.60%를 획득하여 차점자인 쥬가노프 후보를 46.42% 차로 따돌리고 차기 대통령

으로 당선되었으며, 오는 5월 7일 6년 임기(지금까지는 4년)의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 참고로 푸틴은 2000년에 52.94%, 2004년에 71.31%, 그리고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2008년에 70.28%를 각각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나. 대선 결과의 평가

(1) 푸틴의 낙승과 정국 주도의 정당성 확보

- 푸틴의 낙승은 푸틴의 공세적이고 효과적인 대선 캠페인, 야권의 분열 및 강력한 야권 후보의 부재, 현직 총리의 이점을 활용한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 안정과 강대국 지위 유지를 바라는 민심 등이 결합된 결과임.
- 푸틴과 집권세력은 작년 12월 4일 실시된 국가두마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50% 미만 득표, 국가두마 선거 후 지속된 대규모 부정선거 항의시위(소연방 붕괴 후 최대 규모) 및 반 푸틴 데모,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40% 대의 푸틴 지지율 등으로 1차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음.
 -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2007년 12월 실시된 국가두마 선거에서 64.3%의 지지율로 전체 450개 의석의 70%에 달하는 315석을 획득하였음. 그러나 작년 12월 선거에서는 49.32%의 지지율로 238석(52.89)을 차지해 지난 선거 때보다 77석이 감소함. 반면에 러시아 공산당은 35석, 공정한 러시아는 26석, 자유민주당은 16석이 각각 증가되었음.
- 푸틴과 집권세력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할 경우, 이는 장기집권에 대한 국내외적 거부감, 산적한 국정 현안 등과 맞물려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
 - 따라서 푸틴은 총리 신분을 활용해 과거와는 달리 전국 순회를 통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여타 후보들과는 달리 “외교,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이슈, 민주주의, 경제, 민족문제, 러시아의 도전” 등에 관한 7개 논문을 발표해 자신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국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음.

푸틴의 낙승은 푸틴의 공세적이고 효과적인 대선 캠페인, 야권의 분열 및 강력한 야권 후보의 부재, 현직 총리의 이점을 활용한 물적·인적 자원 동원, 안정과 강대국 지위 유지를 바라는 민심 등이 결합된 결과이며...

- 특히, 푸틴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한편으로는 반 푸틴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중산층 및 지식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 교사, 연금 수령자, 저소득층, 지방 거주자 등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사회·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또한 푸틴은 리비아 사태,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면서 ‘강한 러시아 건설과 독자적인 외교 강화’를 강조하였음. 그리고 그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판 오렌지 혁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정 회구 및 강대국주의 민심을 자극하였음.
- 야당 세력의 경우, 구체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메드베데프 정부의 실정과 푸틴의 장기집권 획책 등을 대선 이슈로 삼았으나, 정강 정책이 다르고 후보들의 대권 욕심 때문에 후보 단일화 등 야권 연대를 할 수 없었음.
 - 또한 야당 후보들은 푸틴의 대선 후보들 간 토론 회피 및 언론 매체들의 보도 축소, 그리고 재정부족으로 보다 가시적이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 또한 일부 후보들의 잦은 대선 후보 출마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신선한 이미지를 갖지 못하게 했으며, 이들은 한정된 지지층을 갖고 있었음.
- 한편, 대선 후보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의 어려움은 아블린스키와 10명 무소속 후보들의 후보등록을 무효화시켰으며, 이는 푸틴의 득표율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
- 결론적으로 푸틴의 낙승은 푸틴으로 하여금 정국 주도권을 장악 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국내외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결론적으로
푸틴의 낙승은
푸틴으로 하여금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국내외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2) 비교적 공정한 선거로 정국 안정 도모

- 메드베데프 정부는 대선에서 국가두마 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의 후유증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 공정선거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음.
 - 상기한 바와 같이,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국제 선거감시단을

받아들였고, 95,000개에 달하는 투표소에 20만 개의 웹캠, 즉 인터넷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음.

- 대선 후 민간 선거감시단체인 골로스(GOLOS), 야당의 대선 감시 그룹인 ‘유권자 리그(League of Voters)’, 일부 국제 선거감시단 등에 의해 부정선거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이번 대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성이 높은 선거였다고 판단됨.
 - 푸틴도 총리실 출입 여기자들과의 간담회(3월 7일)에서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을 것이나 영향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함.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파견한 선거감시단도 투표과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단지 문제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비경쟁성, 즉 푸틴과 야당 후보들의 언론매체 접근의 불평등성, 현직 총리인 푸틴의 인적·물적 동원 능력의 현격한 우위성 등은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러시아 공산당과 반 푸틴 시민단체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대선 시 자행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데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온건 야당 세력 및 시민단체들은 푸틴이 약속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야권 및 시민단체들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 및 반 푸틴 데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정국이 안정될 것임. 그리고 푸틴 정부의 민심 수습을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들도 정국안정에 기여할 것임.
 - 실제로 3월 5일에 이어 3월 10일 모스크바 도심에서 개최된 부정선거 항의 및 반 푸틴 데모에 경찰당국의 집회참가 허용 인원인 5만 명에 훨씬 못 미친 2만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음.
 - 이처럼 야당 및 반정부 세력의 데모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푸틴의 낙승과 반 정부 및 반 푸틴 세력의 중심적인 지도자 부재, 그리고 이들 세력의 공통 투쟁 목표 및 투쟁 전략의 부재에 기인함.

야권 및 시민단체들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 및 반 푸틴 데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정국이 안정될 것이며, 푸틴 정부의 민심 수습을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들도 정국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국가두마 선거와
대선을 통해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정치·사회적 특징 중
하나는 중산층 및
시민단체들이
정치 개혁의
추동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는
것이며...

(3) 정치개혁 촉진세력으로서 중산층 및 시민단체 등장

- 국가두마 선거 및 대선을 통해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정치·사회적 특징 중 하나는 중산층 및 시민단체들이 정치 개혁의 추동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는 것임.
 - 푸틴은 자신이 ‘이즈베스티야(*Izvestiya*; 2011. 1. 16)’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00년대 경제 여건의 급속한 개선으로 1998년 전 국민의 5~10%밖에 되지 않았던 중산층이 현재는 20~30%에 달하고 그 규모는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 국가두마 선거 후 부정선거 규탄 및 반 푸틴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유명인사 16명은 1월 18일 ‘유권자 리그’를 창설하면서 3월 대선 등 러시아 내 선거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 도시 중산층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 개혁 추동세력으로의 변화는 작년 9월 말 푸틴과 메드베데프 간 자리바꿈식 권력이동을 선언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음. 그러나 이들은 푸틴이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의 큰 변화가 없는 속에서 장기 집권을 도모하자 서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국가두마 선거를 계기로 야당세력들과 연합해 대규모 부정선거 항의 및 반 푸틴 데모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참하였음.
 - 이들은 점진적 변화 속에 정치적 민주화, 보다 나은 거버넌스 구축,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산층 및 시민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정국 안정 및 대선 승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작년 12월 22일 국정연설 시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고, 푸틴도 금년 2월 6일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음.

(4) 세대교체, 신당창당 등 정치지형의 변화 촉진

- 이번 대선은 무소속 후보인 프로호로프의 정치적 부상, 중산층 및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신 선거문화 정착, 야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낙선, 정치 개혁에 따른 야당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성 증대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음.

- 대선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런 정치현상의 변화는 러시아 정치권의 세대교체, 신당 창당과 정책 연합 촉진 등 러시아 정치 지형 및 푸틴식 정국운영 방식(예: 푸틴주의)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 3위(7.98% 득표)를 차지한 프로호로프는 자유주의 정당을 내세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 ‘우파세력연합’ 등과 통합 또는 정책연대도 모색될 것으로 보임.
 - 푸틴은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 세력의 ‘껴안기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호로프를 신 정부의 각료로 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프로호로프의 입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한편, 프로호로프의 부상과 야당 후보들의 연이은 대선 패배는 야당 지도부 교체 등 세대교체를 촉진할 가능성이 많음.

푸틴 정부는 정국안정 우선하에 작년 국가두마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정치제도 개혁 및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점진적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3. 제3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망

가 국내정책 전망

(1) 정국안정 우선하에 점진적 민주화 단행

- 제3기 푸틴 정부는 정국안정 우선하에 작년 국가두마 선거 및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정치제도 개혁 및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점진적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가두마 선거 부정 및 푸틴의 장기집권 계획에 항의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 개혁 조치를 12월 말 발표한 후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하였음.
 -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방정부 행정수장의 직선제 재도입, 정당 등록 및 대선 후보등록 요건의 완화, 독립성을 가진 국영 TV 창설 등과 같은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푸틴도 정치 분야에서 자신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민주주의와 정부의 질(Kommersant; 2012. 2. 6)”이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발전

제3기 푸틴 정부의 정치제도 개혁 및 민주화 조치는 ‘푸틴주의’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최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중산층 및 시민단체의 요구, 경제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여건 개선, 대외적 이미지 제고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현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음.

- 푸틴은 동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제도 개혁 및 민주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정당등록 요건의 완화, 의회 및 지방선거 참여 요건 완화, 대선 후보등록을 위한 지지서명 수 축소, 전자정부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발전 촉진, 지방 행정기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자치 강화, 구조적 부패 척결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추진, 행정심판제도 도입, 사회단체 대리소송 범위 확대 등 사법체계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 시행 등.
- 그러나 푸틴은 성급한 민주화는 1990년대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점진적인 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푸틴은 연방구성체 수장들의 선출을 위한 직선제 재도입은 필요하지만, 러시아 국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안정자로서 강력하고 능력있는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2004년에 폐지된 전면적 직선제가 아닌 대통령의 후보자 검증권 개입이 유지된 변형된 직선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기 푸틴 정부가 추진할 정치제도 개혁 및 민주화 조치는 사실상 지난 10여 년간 정국운영의 근간으로 작용해 온 ‘푸틴주의’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이러한 정책추진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중산층 및 시민단체의 요구, 경제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여건 개선, 대외적 이미지 제고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임.

(2) 경제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의 추진

- 제3기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해서라도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추진해 온 경제 현대화 정책 및 러시아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푸틴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물론 총리로 재임할 때 러시아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 즉 에너지·자원 의존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의 다각화와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왔음.

- 푸틴은 대선을 앞두고 집권 시 자신이 추진할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적 과제(Vedomosti; 2012. 1. 30)” 제하의 기고문을 발표하였음. 푸틴은 동 기고문에서 “현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안정, 주권, 번영 등을 보증해주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준다”면서 현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세계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산업분야, 즉 나노기술, 의약, 정보기술, 항공기 제작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자원 배분
 - 경제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들 육성 및 2018년까지 국가연구기관에 250억 루블(약 8억 6천만 불) 지원
 - 경제에서의 국가 영향력 축소와 민영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추구 및 공동시장의 확립
 - 부유세, 사치물품세 등을 통한 재정확충과 사회 형평성 제고
- 이들 정책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들로서 제3기 푸틴 정부 들어 이들 경제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는 한편으로는 관련법 제정, 구조적 부패 척결 노력, 집권세력들의 정치·경제적 이익 양보, 정치적 거버넌스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협력 대상국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3) 사회 및 복지 정책의 강화

- 푸틴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사회 및 복지 정책에 관한 기고문, 즉 “정의의 구축: 러시아를 위한 사회정책(Komsomolskaya Pravda; 2012. 2. 13)”에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정책 확충, 교육·문화·보건 수준의 질적 향상,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 인구증가 정책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제3기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해서라도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추진해 온
 경제 현대화 정책 및
 러시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푸틴의
사회복지 정책은
기존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선거용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이 크며,
이들 정책을 구체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적, 동시적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푸틴은 러시아가 당면한 문제들, 즉 빈곤층, 빈부 격차,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사회적 유동성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20년까지 교사, 연구자, 과학자, 의사들의 봉급을 국민 평균 소득의 2배로 인상, 그리고 2020년까지 기술 숙련공 1천만 명 양성
 - 연금 인상 및 점증하는 중산층을 위한 신 연금체계 구축
 - 인구 희소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구에 육아 장려금 매월 7,000루블(약 240불) 지원
 - 교육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과 성적 우수자에 매월 5,000루블(약 170불) 지원
 - 의료기구 및 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1,200억 루블(약 40억 불)의 지원
 - 운동, 금주, 금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 촉진
 - 2012년까지 재향군인에 300억 루블(약 10억 불) 및 일반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인구감소를 저지시키기 위해 매년 30만 명의 이민자 수용정책의 추진
- 상기한 사회 및 복지 정책은 푸틴이 기존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선거용 사회 및 복지 정책의 성격이 큼.
 - 실제로 이들 정책을 구체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아, 전면적, 동시적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나. 외교·안보 정책

(1) 국익·안보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노선 견지

- 푸틴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외교정책에 관한 기고문, 즉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Moskovskiye Novosti*; 2012. 2. 27)”에서 ‘강한 러시아’를 바탕으로 한 독자주의 외교정책 및 반 미국/반 NATO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3기 푸틴 정부는 국익·안보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푸틴은 집권기간 동안 극심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하면서도 러·NATO 관계의 격상 조건으로 발트 3국의 NATO 가입 반대를 철회하였으며, 미군의 중앙아시아 공군기지 사용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 탈레반 전을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상기 기고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반 미국/반 NATO 주장은 대선용일 가능성이 많음.
- 푸틴은 집권 1기 때부터 강성대국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 지위 회복 및 유지를 국정 목표로 설정, 국내적으로는 정국 안정과 경제 발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 다자주의, 다극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메드베데프-푸틴 양두체제하에서도 이러한 정책목표가 그대로 추진되어 왔으며, 단지 이들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에서 양인 간 약간 차이가 있었음. 리더십 스타일에서 푸틴은 메드베데프에 비해 보다 엄격하고 강제적이며, 냉소적인 경향이 있음.
- 제3기 푸틴 정부는 핵비확산, 중동문제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의 해결, 경제 현대화를 위한 서방세계의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해서라도 미국 등 서방세계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러시아의 핵심 이익 및 안보와 직결된 사안(예: 미국/NATO의 유럽 MD 추진,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천명과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과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임.

제3기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핵심 이익 및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천명과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과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2) 미국과 사안별 협력과 갈등 관계의 유지

- 제3기 푸틴 정부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대러 관계 재조정’ 정책으로 구축된 대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신 전략 무기감축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지속적 이행, 이란 핵, 북한 핵 등 핵무기 비확산 협력,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과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계속할 것임.

- 그러나 미국이 유럽 내 NATO 차원의 MD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 또한 시리아 문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확대와 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또는 후임 정부가 러시아 및 CIS 국가들에 관한 개입정책을 지속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 제3기 푸틴 정부는 글로벌 문제 해결, 경제 현대화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 과시 등을 위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대미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물론 제3기 푸틴 정부의 대미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또는 후임 행정부가 러시아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지역 또는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것임.

(3) 중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강화

- 제3기 푸틴 정부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경협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신흥경제 5국)의 국가들과 전략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 및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들어 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경협 부진 가능성, 미국 주도의 NATO 차원의 유럽 MD 추진과 북아프리카·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극동·동시베리아 에너지·자원의 신 수출시장 개척 등은 러시아로 하여금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 집권 2기부터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촉진은 물론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동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러시아는 2010~2011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제3기 푸틴 정부는
글로벌 문제 해결,
경제 현대화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 과시 등을 위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대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East Asia Summit),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에 가입하였음은 물론 2009년 BRICS를 정상회의체화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대중 정책의 경우, 제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는 중국과 지난 수년 동안 발전시켜 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포괄적 협력을 지속할 것임. 특히, 러시아는 연례 정상회의, 총리회의 등을 활용한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EAS, ASEM,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BRIC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과 같은 다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임.

- 물론 러·중 양국 간 가스공급가 협상, 중국인 불법 체류, 중앙 아에서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 등이 상존하나 제3기 푸틴 정부는 실용주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차원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실제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축전 및 전화통화를 통해 푸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새 경지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도 이에 대해 “최근 양국은 주요 국제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함.
-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러·중은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사태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 공조를 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음.

- 대일 정책의 경우, 제3기 푸틴 정부는 남쿠릴 4개 섬 문제 해결을 통한 전면적 대일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양국 간 영토문제 해결 방안에 이견이 현격해 조기 해결은 쉽지 않고, 그 결과 양국 관계가 당분간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되지는 못할 것임.

- 푸틴은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4개 섬 중 1956년 소·일 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의 반환을 고려

대중 정책의 경우, 제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포괄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추구하고 있음.

- 참고로 2010년 가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쿠릴 4개 섬을 방문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소유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러·일 간 영토분쟁이 국제적으로 부각되었음.

(4) CIS 국가들과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의 강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CIS는 지리적으로 최우선적인 지역이며, 제3기 푸틴 정부는 1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 비록 상기한 대외정책 관련 기고문에서 CIS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CIS는 지리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지역임.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는 1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 경제통합의 경우, 제3기 푸틴 정부는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을 2015년까지 출범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특히,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 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 가입의사를 표명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가입을 추진하면서 가입에 유보적인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기 위한 정치·경제·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특히 푸틴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내 ‘관세동맹’을 ‘유라시아 경제공간’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한다는 대 CIS 경제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2010년 7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세 국가가 참여한 ‘관세동맹’이 출범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공동 경제·통상기구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음.
 - 이들 3국은 1차적으로 2012년 1월부터 3국 간 노동,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공동 경제공간’을 출범시켰음. 3국 간 통합된 경제공간의 창설은 일단 1억 6천만 명의 소비자 공간이 형성되면 지경학적으로 EU에 대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제 허브로 발전될 것임.
- 안보협력의 경우, 제3기 푸틴 정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내 신속대응군의 역량 및 역할 확대, SCO 차원의 중앙아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등과 같은 대 CIS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

- 과거 푸틴 정부는 안보차원에선 CSTO를 NATO의 동진에 대한 유라시아 지역 차원의 러시아 주도 집단안보동맹체로 발전시켰으며, 2006년 우즈베키스탄이 재가입함으로써 그 역량이 확대되었음.
- 또한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양자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조약을 체결해 CIS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였음.

(5)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등 다자 외교 강화

- 제3기 푸틴 정부는 2012년 9월 8~9일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아태 지역국가들과의 경험 확대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또한 제3기 푸틴 정부는 국제평화와 번영, 국제현안 해결,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 외교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그동안 G8, G20, APEC, OSCE, BRICS 등 각종 다자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쳤으며, 작년 12월에는 1993년부터 추진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실현시켰음.

제3기 푸틴 정부는 강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국가 안보와 ‘강한 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국방개혁 및 군과 군수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6) 군사력 증강 정책의 추진

- 제3기 푸틴 정부는 강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국가안보 및 ‘강한 국가’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09년 말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및 군과 군수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러시아는 옐친(Boris Yeltsin) 정부 때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획기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2008년 8월 발발한 러·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 군의 취약성이 드러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됨.
 - 그 결과 2008년 10월 대대적인 국방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당시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인 세르듀코프(Anatoly Serdyukov)는 군 개혁은 대규모

제3기 푸틴 정부의
군과 군수산업의
현대화 정책 추진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전면적인 추진이
힘들 것이며,
이들 정책 추진 여부는
고유가의 지속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육상, 해상, 공중전에서 군의 전투력과 기동성을 갖고, 최소한 3개 지역의 지역전과 국지전 수행이 가능한 군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힘.

- 푸틴은 대선 기간 중 발표한 국가안보 관련 기고문, 즉 “강함: 러시아를 위한 국가안보(*Rossiiskaya Gazeta*; 2012. 2. 20)”에서 국가주권 보호 및 강대국 지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과 군수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
 - 2020년까지 23조 루블(약 7,700억 불)을 투자해 러시아 군과 군수산업의 혁신과 현대화를 추진
 -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자의 역할과 안보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CSTO 강화
 - 전군의 최신 첨단무기로의 무장. 향후 10년 동안 40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50개 전함, 2,300개 탱크, 100개 공중폭격기, 10개 이스칸데르 M 미사일 구매 및 공급
 - 군 교육 및 군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10개의 연구 및 교육센터 개소
 - 2012년 1월 기해 군의 임금, 연금 및 여타 혜택 증액, 2013년 1월부터 안보 관련 종사자의 동일한 혜택 적용
 - 해군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 시행
- 제3기 푸틴 정부의 군과 군수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상기 정책 추진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미 소개한 사회·복지 정책에 드는 예산을 고려해 볼 때, 계획대로 전면적인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임. 물론 이들 정책의 추진 여부는 고유가의 지속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일부 학자의 경우, 푸틴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미화 1610억 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가가 배럴당 150불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²⁾

2) Howard Amos, “Plotting the Budget Against Oil Prices,” *The Moscow Times* (2012. 2. 26).

다. 한반도 정책

(1) 영향력 유지 위한 균형 정책 지속

- 제3기 푸틴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 및 양국과의 3각 협력 현실화를 위해 집권 1기부터 지속해 온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은 2000년 1월 제1기 푸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었음. 푸틴은 1990년대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 축소는 소원한 러·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러·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였음.
 - 그결과 2000년 2월 신 조약의 체결, 소련,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첫 평양 방문, 김정일과 두 차례 방러 추진, 제2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6자회담의 참여 등이 추진되었음.
- 또한 푸틴은 남·북·러 3각 협력의 현실화를 통한 3국 간 경제적 의존성 심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영향력 제고 차원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TSR-TKR 연결사업을 제안하였음.
 - TSR-TKR 연결 사업이 북한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작년 8월 울란우데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합의,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러·북, 한·러 정상회담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푸틴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한·러 양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푸틴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조기 성사를 위해 협력 하자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짐.
- 제3기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목표, 즉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저지, 군사·정치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간 건설적 대화와 협력 지지, 한반도 주변 3국과 세력균형 유지, 호혜적인 남·북·러 3각 경협을 추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남한 경사적 균형 정책이 불가피할 것임.

제3기 푸틴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 및
양국과의 3각 협력
현실화를 위해
집권 1기부터
지속해 온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 대북 우호·협력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러·북 관계는 제1기 푸틴 정부하에서 정상화되었으나 작년 8월 울란우데에서 정상회담에 개최될 때까지 9년 동안 정상회담이 부재하는 등 매우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음.
 - 이는 2002년 가을 제2차 북핵 사태의 발발과 뒤이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대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의 미해결, 6자회담의 진행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메드베데프·김정일 정상회담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및 기타 양자 현안인 북한의 대러 채무, 군사협력 확대, 대북 식량지원 등을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재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푸틴은 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월 27일 언론 기고문(“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에서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불용하며, 북한 핵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푸틴은 북한 신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북한 신 지도부를 자극할 경우 위험한 대응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제3기 푸틴 정부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세의 안정과 북핵문제의 진전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우호·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지원,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설득, 남·북·러 가스관 사업 조기 성사, 북한의 대러 채무 및 군사협력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3차 핵실험 단행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제3기 푸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지원,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설득,
남·북·러 가스관 사업
조기 성사,
북한의 대러 채무 및
군사협력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3) 한국과 전략적·포괄적 협력 확대 노력

- 러시아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에 빈번한 정상회담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음. 최근 들어 한국의 대러 투자, 교역량 증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 등에 힘입어 양국 간 실질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이 외교관계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다양한 학술·예술·문화 행사는 2011년의 양국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러 대화 포럼’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후 2011년 11월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음.
 - 따라서 금년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러 대화 포럼’에 푸틴의 참석 여부는 제3기 푸틴 정부의 대 남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는 경제 현대화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유력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는 한국과 경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임.
 - 러시아의 WTO 가입 실현은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교역여건을 개선시켜, 한·러 경협을 촉진시킬 것임.
 -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활용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대 남한 협력정책을 적극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제3기 푸틴 정부는 지난 수년간 발전시켜 온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면서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현대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과 전략적·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려 노력할 것임.

제3기 푸틴 정부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면서
 경제 현대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과
 전략적·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려
 노력할 것이며...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남·북·러 가스관 조기 성사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 경주

- 제3기 푸틴 정부의 출범은 남·북·러 3각 경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한국은 남·북·러 3각 경협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실제로 푸틴은 집권 1기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TSR-TKR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제고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
 - TSR-TKR 연결 사업은 남·북·러 3국 실무자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기도 했으나 북한 측의 비협조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차 모스크바를 방문 시 남·북·러 3국이 참여하는 '3대 신 실크로드', 즉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건설 계획을 제안했음.
 - 당시 양국은 오는 2015년부터 연 750만 톤 가스공급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작년 8월 24일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합의되었음.
- 그러나 3국 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스 공급가, 가스관 매설로, 가스관 통과료 등을 합의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통과 가스관의 안정적인 공급 장치 구축임.
- 만약 가스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는 여타 3각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남·북·러 3국 간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켜 3국 간 정치·외교적 협력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한국은 가스관 연결 사업의 조기 추진과 안정적 공급 장치의 마련을 위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러 3국 정상회담 또는 이에 준하는 고위급 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기 푸틴 정부 출범은 남·북·러 3각 경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한국은 남·북·러 3각 경협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나. 러시아 경제 현대화, 민영화,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통한 경제적 유대 강화

- 푸틴의 ‘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목표는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즉 경제 현대화 정책, 민영화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 푸틴은 경제정책 관련 정강 제시 기고문에서 한국을 빠른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한 국가로 지명할 정도로 한국 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협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은 대러 경협 확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및 신 시장개척에 기여할 것임을 고려해, 러시아가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 민영화,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러시아의 동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참여 방안 마련해 기업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양국 간 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의존도의 심화는 정치·안보 분야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임. 특히, 통일한국의 준비 과정에서 접경국인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제적 협력 관계의 심화는 정치·외교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임.

한국은 통일한국의 준비 과정에서 접경국인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협 관계의 심화는 정치·외교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며...

다. 신 정부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 제3기 푸틴 정부의 출범으로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 체제가 구축되고 부분적인 내각 내 인사교체가 예상됨.
-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한·러 관계는 양국 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후 가장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되었음.
 - 실제로 빈번한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 교류, 그리고 양국 정상이 참여한 두 차례에 걸친 ‘한·러 대화 포럼’ 개최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 또한 양국 간 경협도 급속히 증대되었음.
- 따라서 한국은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구축된 이러한 협력관계를 활용해 신 정부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은
 푸틴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6자회담 조기재개와
 북한 핵문제 해결,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저지,
 급변사태 방지 및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대러 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러 외교 강화

- 상기한 바와 같이, 푸틴은 북한 핵보유를 불용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안착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길 바라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이를 반대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옴.
- 따라서 한국은 푸틴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근 불거진 ‘광명성 3호 위성발사’ 저지, 급변사태 방지 및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대러 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2012. 3. 16

토론: 교 수 김덕주
 한양대 교수 강봉구
 INSS 국제안보연구실장 서동주
 편집: 책임연구원 김자용